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78호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07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3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1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2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0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태은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28호)	김윤경	2020. 2. 13.	기술인력 변경	윤지선 (산업위생관리기사) [해임]	차성식 (대기환경기사) [선임]
				이호진 (대기환경기사) [해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10. 25.

인천광역시장

1. 등록말소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제2000-0- 인천광역시-140호	새마을문고 인천광역시남구지부	배관기	새마을문고 설치 및 지도육성	2021.10.25.

※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말소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3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2, 제8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3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116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 ----- ----- ----- ----- ----- -----.
제1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8조 (설치) ① ----- ----- 제126조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6조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제22조 (설치) ① 법 제126조 --- ----- -----

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24조 (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② (생략)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88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설치) ① 법 제12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검단 및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의회 정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28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50명 → 7,378명(28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29명 → 3,945명(16명 증)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6명 → 118명(12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16명 → 3,840명(24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6명 → 157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27명 → 3,650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3명 → 197명(4명 증)
- 연구사 정원 : 160명 → 164명(4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50명”을 “7,3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29명”을 “3,9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6명”을 “1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78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40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19	11		1	4	3	
3·4급	2	2					
4급	157	96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50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7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4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7,350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378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3,929명</u>	1. ----- : <u>3,945명</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u>106명</u>	4. ----- : <u>118명</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7,350명 → 7,378명(28명 증원)

- 일반직 : 24명 증원
- 연구직 : 4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2,435,608천원

○ 일반직 : 2,087,664천원(86,986천원×24명 증원)

○ 연구직 : 347,944천원(86,986천원×4명 증원)

※ 산출기초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2,435,608	2,457,528	2,479,646	2,501,963	2,524,481	12,399,226
	소계	2,435,608	2,457,528	2,479,646	2,501,963	2,524,481	12,399,226
재원 조달		2,435,608	2,457,528	2,479,646	2,501,963	2,524,481	12,399,226
국 비							
시비	소 계	2,435,608	2,457,528	2,479,646	2,501,963	2,524,481	12,399,226
	일반회계	2,435,608	2,457,528	2,479,646	2,501,963	2,524,481	12,399,226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21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0.9% 반영 추계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1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정비함(안 제1조)

나.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제2조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조 (위임사항) ①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2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3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u>조례</u> 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조례</u> 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 ----- ----- ----- ----- -----.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